

## OECD 행정 간소화 전략<sup>1)</sup>

### 1. 배경

- 시민과 기업들의 민원서류 작성 및 신청, 인·허가, 기업정보 보고 등 형식적 절차에 따른 시간 및 자원의 낭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짐
- 또한 국내규제와 행정환경이 기업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<sup>2)</sup>
  - 완전한 규제철폐가 아니라 표준품질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규제를 제정하기 위해 규제품질프로그램(regulatory quality programmes)을 채택함

### 2. 행정 간소화 전략

- 20개국 이상의 OECD 회원국에서 행정 간소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나, 대부분의 경우 범정부적 차원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하에서 이행하고 있음
  - **규제 간소화 전략**은 ① 신규 규제에 따른 잠재적 행정부담 조사 ② 행정부담의 요인이 되는 규제 개혁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됨
    - 많은 국가들이 기존 규제검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, 신규 규제에 대한 사전조사도 **규제영향평가(RIA: Regulatory Impact Assessment)** 과정에서 이행되고 있음
  - 규제영향평가에서는 기존의 규제개혁이 투명하고 공정한 분석들에 근거하며 규제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함
    - 자동검토과정(Automatic Review Process)을 도입하여 새로운 규정을 실제 시범 적용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실질적으로 측정 및 평가함
- ※ 일부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규제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 마련

1) OECD (2007), Cutting Red Tape : National Strategies.  
available at [http://www.oecd.org/findDocument/0,3354,en\\_2649\\_34141\\_1\\_119696\\_1\\_1\\_1,00.html](http://www.oecd.org/findDocument/0,3354,en_2649_34141_1_119696_1_1_1,00.html)

2) 세계은행 연차보고서(Doing Business)는 행정적 부담을 경쟁력의 주요변인으로 포함시키고 있음

- 규제영향 측정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일반 시민 및 비영리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기술을 개발하는 추세임
    - 22개국 중에서 19개국은 행정 간소화를 위한 정부프로그램 별도 운영, 14개국은 행정 부담 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9개국에서 행정 감축 목표치를 산정함
  - 대부분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**표준비용모델(SCM : Standard Cost Model)**을 도입·적용하고 있음
    - 단일 자료제출의무(information obligation)에 따라 기업에 가중되는 행정부담을 측정하며, 정부의 감축 목표 수치화 및 성과측정이 가능함
    - 행정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양식을 이용하기 위해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SCM 네트워크 형성
- \* 호주, 핀란드, 독일, 아일랜드, 룩셈부르크, 영국, 노르웨이, 스웨덴, 덴마크, 벨기에, 네덜란드, 프랑스 등

### 3. 행정 간소화를 위한 도구

- 행정 간소화 목표 달성 및 행정규제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**원스톱샵(one-stop shops)** 및 **프로세스 재설계(process re-engineering)** 등을 사용하고 있음
    - 원스톱샵은 기업과 시민들이 단일창구에서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민원신청 등 다양한 거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
      - 최근 행정 간소화 정책의 뚜렷한 변화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 증가되었으며 원스톱샵도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상에서 보다 많이 제공됨
      - 범정부차원(whole-of-government)의 정보접근을 위해 전자정부 서비스와 연계됨
    - 프로세스 재설계란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기업의 행정 간소화에 주로 사용됨
      - 면허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
  - 이외에도 위험기반 접근방식(risk-based approach)을 도입하여 위험요소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조사 및 데이터 요구를 감소하거나,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 수준을 수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
- \* 기업에게 보다 많은 자문제공 및 신규 법·규정에 대한 충분한 공지 등 고려

## 행정 간소화 우수사례

- OECD 각국의 행정 간소화 전략 및 도구는 역사·문화적 배경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을 우수사례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음
  - 신규 규정 발효 전에 잠재적인 부담요인 측정 및 근본 원인 추적
  - 신규 규정 도입 이전 규정영향분석을 통해 행정부담 정도에 대한 정보 획득
  - 행정부담 감축 목표 설정 및 간소화 정책 지속적 추진·점검
  -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감시
  - 정보공유 및 면허절차 간소화 등 행정 간소화를 위한 정보기술의 중요성 증대
  - 성과측정 및 결과 전달

## 4. 추진체계

- OECD 회원국들이 행정 간소화를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조직 모델은 ① 특수 목적기관(single purpose entities), ② 행정 간소화 기관(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agencies), ③ 규제개혁기관(regulatory reform agencies), ④ 외부 위원회 등으로 구분
  - 특수목적기관 : 특정 그룹 혹은 분야를 위한 행정 간소화 등 특정 목적을 갖고 추진
  - 행정 간소화 기관 : 기업, 시민 및 공공부문을 위한 총괄적인 간소화 정책 추진
  - 규제개혁기관 : 규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간소화 정책 포함
  - 외부 위원회 : 대부분 학계 및 기업 등과 같은 비정치적 성격을 가짐
- 행정 간소화를 위한 모델은 각 국가별 정치적·법적 구조 및 목표에 따라 다양할지라도, 최근 OECD 국가들은 아래와 같은 경향을 보임
  - 행정 간소화를 위한 보다 폭넓은 규제개혁에 대해 각 정부기관에 책임 부여
  - 외부 위원회 및 전담팀의 조직을 통해 행정 간소화 추진력을 높이는 한편, 외부기관은 고위급의 정치적 지지를 받아 구체적인 정책 제안 제시
  - 다양한 국가기관 간 및 회원국 간 행정 간소화에 대한 다각적 논의

## 5. 향후 발전방향

- 행정 간소화 정책은 단일의 독립적인 목표 보다는 규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 목표에 포함되어 이행될 것임
- 행정 간소화가 규제개혁과 동일시되어 규제의 질이 높을수록 행정부담이 최소화될 것임
- 보다 정교한 측정 기술, 전자서비스 플랫폼 이용 및 광범위한 협업 등이 발달함에 따라 간소화 정책에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 될 것임
  - 행정 간소화 정책과 규제의 질적 향상이라는 양면의 과제를 두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적절히 자원이 배분되어야 함
- 중앙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을 행정 간소화 프로그램에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